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일영령에 헌화하고 있다.

뉴스스

## ‘혁신도시 시즌2’ 임박, 광주·전남 공공기관 추가 유치 촉각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행정 대통합 시도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한 가운데 지난 2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공동 선언문 발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약 350개 공공기관을 이전 검토 대상으로 파악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광주·전남 선제 대응  
 한전·농어촌공사·aT 등 수도권 부속시설 추가 이전 관심  
 농·수협중앙회 본점 지방 이전 뒷받침, 법 개정도 추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착수 후 이르면 올 상반기에 '2차 이전 로드맵'과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내년(2026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국정과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먼저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시즌1'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국

텐즈진흥원 등 에너지·농생명·정보통신·문화예술 4개 분야 등 총 1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이들 기관의 부속시설 이전 여부가 '시즌2'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는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한전 인제개발원의 근무 인원은 약 100명 수준이지만 부지 면적이 68만1201㎡(약 20만 6000평)에 달한다. 인제개발원이 나주 본사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인제 양성과 연

구 기능 간 시너지 효과는 물론 기존 부지 활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한전은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 경기도 의왕 자재검사처, 대전 유성구 전력연구원과 설비진단처 등 주요 부속기관을 수도권 또는 인접 지역에 두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수도권에 4개 부속기관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안산에 농어촌연구원(134명)과 인제개발원(54명), 안양에 농어촌자원개발원(68명), 대전 서구에 안전진단사업단(105명)이 있다.

농어촌공사는 분사 이전 이후에도 산하기관이 수도권에 분산돼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분사 소재지인 나주로의 단계적 이전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2면에 계속)

기동취재부

광주시·전남도민, 상생 한계 요인으로 '소지역주의' 지목  
 3년여 전 광주전남연구원 행정통합 설문 관심  
 전문가 70%, 통합 필요성 공감 "빠를수록 좋다"

새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통합을 선언하면서 지난 2022년 광주·전남연구원 행정통합 설문조사 결과(비공개)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높다'는데 공감했으며, 시도민들은 '자기 지역을 우선 생각하는 소지역주의'를 광주전남 상생협력의 한계 요인으로 꼽았다.

광주전남연구원(2023년 광주와 전남연구원으로 분리)은 시·도간 통합 논의가 지역 사회 내 화두였던 2022년 6월과 8월16일~9월15일, 11~12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문가와 지역민 의견·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주제는 경제통합과 행정통합이었다.

6월 실시한 전문가 조사는 광주·전남 내외부 전문가 100명(온라인 설문)을 대상으로 했다.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기에 대해 '빠를수록 좋다' 46%, '타 지역의 추진 경과를 고려해 추진' 28%, '법·제도적 제반사항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난 뒤 추진' 26% 순으로 답했다.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다' 46%, '매우 높다' 24% 등 70%가 공감했다.

행정통합을 전제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간 갈등 조정 26.5%, 행정구역 조

정·개편 24%, 중복행정기능 간소화와 행정비용 절감 방안 22%, 통합교통체계 구축 11% 순으로 응답했다.

같은 해 8월16일~9월15일 사이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도민들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 지자체간 갈등 조정 20.6%, 행정구역 조정·개편 18.9%, 통합교통체계 구축 17.5%, 중복 행정기능 간소화·행정비용 절감 방안 16.9% 순의 의견을 나타냈다.

11~12월 사이 시도민 20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시도민들은 시·도 상생 협력의 한계 요인으로 '자기 지역을 우선 생각하는 소지역주의'(33.5%)를 지목했다. 양 시도의회의 시각 및 의견 차이 19.3%, 양 시도 집행부 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이 16.6%로 뒤를 이었다.

통합의 기대효과로는 소득 증대(5점 만점 기준 3.58점), 복지 혜택(3.42점), 일자리 기회 확대(3.37점)를 꼽았다. 이 자료는 당시 시도 간 통합 논의가 중단되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도 대통합을 선언한 뒤 "4년 전(광주시와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결국 보류됐다"며 그 이유로 당시 중앙 정부의 무관심을 들었다.

이승원 기자

## 이 대통령, 광주·전남 국회의원 9일 靑초청오찬

李 "지역주도 성장 새 길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 뜻 모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행정통합을 비롯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에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뉴스스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